

文化大革命이후의 社會主義再認識*

- 脫社會主義化過程 -

李 民 子

목 차

I. 서 론

III.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분석

II. 사회주의재인식

IV. 결 론

I. 서 론

중국에서 사회주의는 부강한 중국건설을 위한 이론이었다. 혁명기의 사회주의는 낙후한 농업경제에 기초를 둔 중국을 近代化시키고 반식민지 상태에 있는 중국을 해방하기 위한 抗日의 무기였다. 사회주의건설기에 있어서도 주된 목적은 부강한 중국건설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가 자본주의보다 절대적으로 우월함을 입증하지 못한다면 폐기될 수도 있을 것이다.

중국에서 사회주의혁명이 제국주의 일본으로부터 독립하는 유일한 길로써 선택된 것처럼 사회주의현대화 역시 자본주의로부터 독립을 보장하는 유일한 길로서 선택되었다. 왜냐하면, 생산력의 정체를 지속시킨다면 문을 닫고 사회주의체제를 고수하려해도 경제적 경쟁에서 패배한 사회주의는 자

* 이 연구는 1992년 교육부 지역연구지원금으로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가 주관하여 이루어진 것임.

본주의의 경제적 침투를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중국내 견해에 의하면 중국의 사회주의혁명은 자본주의적 발전이 봉쇄된 상태에서 마지막 남은 길이었다. “근대사에서 중국은 자본주의적 길을 갈 만한 階級, 政黨의 조건이 없었다. 문제는 중국인이 자본주의적 길을 가기를 원하느냐 여부가 아니었다. 이미 제국주의의 침입은 완전히 자본주의의 자유로운 발전적 길을 봉쇄했다. 중국에는 독립적이고 발달한 민족자본가가 존재하지 않았다.”¹⁾ 마찬가지로 개혁, 개방역시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실패한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유일한 길이었다고 할 수 있다.

1978년 11期 3中全會를 기점으로 농촌에서 시작된 중국의 개혁, 개방정책은 1984년 [경제체제개혁에 관한 결의]후 도시로 확산되었다. 그러나 1989년 천안문사태로 인하여 개혁, 개방은 그 속도를 늦추었다. 1992년 덩소평의 “南巡講和”를 통해 다시 개혁, 개방을 가속화한다는 방향으로 돌아섰고, 14全大會(中國共產黨 全國代表大會)에서 그 방침을 재확인했다. 덩소평의 南巡講和에 따르면 1989년의 정치풍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발전이 빨랐고, 인민들도 이를 만족해하고 있으므로 11期 3中全會 이후의 노선과 정책은 정확한 것이고, 앞으로도 변할 수 없는 것이다.

공육지에 따르면 14大報告는 11期 3中全會이후의 노선과 방침을 계승하였고, 사회주의초급단계의 관점과 사회주의상품경제의 관점을 포함한다. 그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덩소평의 중국특색을 지닌 사회주의건설이론이라는 남순강화의 정신을 충분히 반영하였다. 둘째, 새로운 사상, 관점을 이용하고 마르크스주의를 계승, 발전시켜, 경제, 문화가 비교적 낙후한 국가인 중국이 어떻게 사회주의를 건설할 것인가, 어떻게 사회주의의 기본문제를 공고히하고 발전시킬 것인가에 답했다.²⁾

1) 中國北京市委黨史研究室 北京市黨史學會 編, 「中國共產黨與社會現代化」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1), p.44.

2) 龔育之, “中國社會主義的命運”, 「新華文摘」 1992. 12, p.2.

중국의 정책입안가들은 현재의 중국의 역사발전단계를 '사회주의초급단계'로 보고 이런 역사발전단계에서의 경제발전정책으로 13全大會에서는 '사회주의상품경제론', 14全大會에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제시했다. 현재 중국변혁의 핵심내용은 경제발전이라는 하나의 중심과 개혁, 개방 및 4항 기본원칙전지라는 두개의 기본점이다. 경제발전이라는 전자는 혁명기부터 지속적으로 추구해 온 것이다. 후자는 시기에 따라 변할 수 있는 정책이다. 이 글에서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내용을 살펴보고, 사회주의상품경제론과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소개함으로써 중국의 사회주의재인식을 평가하고자 한다. 특히 이 글에서는 중국의 현재의 변화를 탈사회주의화라는 시각에서 설명하려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기존의 사회주의관념에서 해방되어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으나 자본주의로의 회귀라고만은 볼 수 없기 때문이다. 또 중국의 변화는 완결된 것이 아니라 기존 사회주의에 대한 재평가의 과정에 있다. 따라서 과정적 개념으로 탈사회주의화라는 것이 적합하다고 생각한다.

중국의 마르크스주의해석과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의 변화는 중국의 실재를 반영한 중국식 사회주의모색의 과정이라 할 수 있다. 즉 중국의 마르크스주의자들이 끊임없이 추구했던 과제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원리와 중국의 실재를 상호 결합시킨 중국적 특색을 지닌 혁명노선의 모색과 사회주의 건설노선의 추구였다. 따라서 중국혁명의 과정, 대약진, 인민공사, 문화대혁명, 개혁, 개방 모두 중국식 사회주의의 모색이라는 맥락에서 이해될 수 있다. 이런 견해는 주로 중국내 官方資料에 기초한 것이다. 중국식 사회주의의 내용규명을 개혁, 개방을 실시하고 있는 현재로 제한하여 살펴보려면 우선 몇가지의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건설과정에서 文革期와 改革, 開放政策은 서로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는 마르크스주의와 사회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반영하고 있다. 문혁은 사회주의혁명과정에서의 마르크스주의이해를 기초로 진행된

것이다. 반면에 1978년 이후에 진행되고 있는 개혁, 개방은 사회주의 건설 과정에서 마르크스주의, 사회주의에 대한 이해를 반영하고 있다. 이는 사회주의 재인식, 자본주의에 대한 재평가로 나타났다. 그 구체적 내용은 무엇인가? 이를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통해 고찰하려 한다.

둘째, 중국식 사회주의의 내용은 원론적 의미의 사회주의와 어떤 점에서 다른가?

세째, 어떤 근거로 중국이 자본주의의 상징이라 할 수 있는 시장경제를 실시하면서도 그것이 자본주의화가 아니라 중국식 사회주의로 설명될 수 있는가? 사회주의제도하의 私營, 個體經濟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이를 사회주의 시장경제에 대한 분석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중국식 사회주의로서의 사회주의 시장경제론은 사회주의의 재해석이라는 명분하에 점진적으로 기존의 사회주의를 포기하는 과정이라 볼 수 있다. 왜냐하면 사회주의는 소유제 외에도 경제운영방식으로도 자본주의와 구별된다는 것이 일반적 견해이기 때문이다. 현재 중국의 변화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計劃經濟는 시장에 의존하고, 公有제도 個體經濟나 私營經濟를 인정함으로써 점차적으로 잠식당하고 있다. 분배제 면에서도 능력에 따른 분배 이외에 다양한 분배제를 인정하여 계층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따라서 중국의 1978년 이후의 10년이 넘는 변화의 과정을 단지 사회주의, 자본주의의 틀로만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이 두 개념의 틀을 벗어나는 새로운 요소들이 이미 대두했다.

현재 중국변화의 향방을 설명하는 주요문제는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라는 체제는쟁보다는 자본주의가 아닌 사회주의를 먼저 택한 국가가 어떻게 근대화해 가고 있는가라고 생각된다. 기존의 근대화는 자본주의체제하의 경제발전전략이라고 생각되는 측면이 강했다. 그러면 중국의 근대화도 資本主義化로 끝날 것인가? 이 문제는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이 논문에서는 논외로 될 것이다.

II. 사회주의재인식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사회주의를 해야 하는가 말아야 하는가? 사회주의는 도대체 어떤 우월성이 있는가? 이런 문제들을 둘러싸고 현재 중국내 사람들의 인식은 일치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문제는 무엇이 사회주의이고, 어떻게 사회주의개혁을 진행시키느냐이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주의재인식과정에서 현실의 사회주의와 마르크스가 구상한 사회주의간의 차이 및 원인에 대해 재인식해야 한다. 사회주의재인식의 임무는 마르크스가 구상한 사회주의와 현실사회주의의 이양자간의 연결점을 찾는 것이다. 그래서 전통이론과 현실생활간의 교량을 세워 현실의 기초위에서 마르크스의 과학사회주의학설을 완성, 발전시키는 것이다.”³⁾

이 재인식과정의 방법론은 역사적 조건에서 출발해 마르크스가 구상한 사회주의를 인식하고, 현실적 조건에서 출발해 현실의 사회주의를 인식하는 것이다. 이런 과정에서 나오는 결론은 “마르크스가 구상한 사회주의와 당대 현실의 사회주의는 다른 발전과정상의 사회주의이다. 전자는 후자의 발전목표이지 발전의 출발점이 아니다. 발전목표와 발전의 출발점은 과학사회주의의 본질상 일치하는 것이 아니다. 이런 구별을 하지 못했기 때문에 과거에 단계를 초월하는 공상론의 착오를 범했다.”⁴⁾라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재인식을 통해 제기되고 있는 중국적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덩소평의 다양한 저작을 종합해 보면 “중국적 사회주의는 격렬한 계급투쟁도 아니고 평등주의도, 빈곤의 평등화도 아니고 다른 공산주의 국가의 경험과 모델을 기계적으로 반복하는 것도 아니라는 것만을 암시한다.”⁵⁾ 이런 특색을 지닌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

3) 包心鑑, “論深化對社會主義的再認識”, 『上海社會科學』 1989. 2, p.9.

4) 同上, p.9.

다.

1. 사회주의초급단계론

중국식 사회주의의 구체적 내용은 역사발전단계론으로서의 사회주의초급단계론과 경제발전전략으로서의 사회주의상품경제론,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이다. 중국식 사회주의발전과정에서 모택동의 新民主主義論이 이론의 1차 비약이라면 덩소평의 社會主義初級段階論은 이론의 2차비약이라 할 수 있다. 그러면 현재 중국은 어떤 역사단계에 처해 있는가? 첫째, 중국사회는 이미 사회주의사회다. 중국은 여기에서 이탈할 수 없다. 둘째, 중국의 사회주의는 아직도 초급단계에 처해 있다. 이 단계를 초월할 수 없다. 그러면 사회주의초급단계는 어떠한 역사단계인가? 그 구체적 내용은 13全大會 조자양의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 “초급단계는 모든 국가가 사회주의로 진입할 때 거쳐야 하는 최초의 단계를 일반적으로 지칭하는 것이 아니다. 중국처럼 생산력이 낙후하고 상품경제가 발달되지 못한 조건아래서 사회주의를 건설해 가는 과정에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특정단계를 지칭한다.이 단계는 사회주의의 경제기초가 확립되지 않은 과도시기와 다를 뿐 아니라 이미 사회주의현대화를 실현한 단계와도 다르다.”⁶⁾ 역사발전과정에서 사회주의초급단계의 위상은 중국의 경제학자 于光遠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초급단계는 저급공산주의의 초기단계이다. 사회주의는 고도단계의 공산주의와도 구별되고, 중간, 고도단계의 사회주의와도 구별된다. 사회주의 초급단계는 특수한 단계이고, 상대적으로 불완전한 사회주의이므로 긴 발전과정을 경험해야 할 것이다.

5) 쿠킨스키, 윌러스타인, 조영환 편역, 「전환기의 세계와 마르크스주의」, (서울: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1990), p.299.

6)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國防部總政治作戰部編, 「共匪原始資料彙編」第58號(臺北: 國防部總政治作戰部, 1987), p.14.

그러나 사회주의초급단계는 과도기와도 다르다. 사회주의초급단계의 특성은 무엇인가? 첫째, 마르크스와 동소평이 처한 사회적 현실의 차이에서 사회주의건설에 대한 다른 발전전략이 모색되고 있다. 마르크스의 사회주의건설의 출발점은 상품경제가 고도로 발달한 사회이고, 자본주의가 생산력 증대의 장애물로 된 사회이다. 그러나 중국은 낙후한 상품경제 단계인 半殖民地, 半封建社會에서 사회주의혁명을 성공시켰다. 따라서 사회주의실현의 전제인 생산력증대의 과제가 사회주의로 전가되었다. 즉 중국혁명의 특수성은 마르크스가 예상했던 것보다 공유제로의 사회주의개조는 빠르고 쉬웠다. 반면에 생산력증대를 부르조아가 담당하지 않았으므로 사회주의체제하의 임무로 되었다. 혁명이 쉬운만큼 사회주의건설은 어려운 상황에 직면했다. 이 조건이 중국식 사회주의건설의 출발점이다.

둘째, 1956년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완료했음으로 중국의 현단계는 과도기와는 다르다. 물론 사유제와 공유제가 공존하고 상품경제가 존재한다는 면에서 드러나는 현상은 같을 수 있다. 그러나 과도기가 자본주의적 요소의 폐지를 통한 사회주의로의 개조를 지향하는 시기라면, 사회주의초급단계는 역으로 자본주의적 요소를 부분적으로 도입함으로써 생산력을 증대시켜 사회주의건설을 지향하는 시기이다. 과도기와 사회주의초급단계를 구분하는 근거는 주요모순의 차이다. 과도기의 주요모순이 계급투쟁인데 반하여 사회주의초급단계의 주요모순은 생산력증대다. 즉, “초급단계의 역사적 임무(주요모순)는 강대중국건설을 위한 4개현대화이다. 반면에 과도기의 일반적 목적은 혁명완수와 사회주의로의 개조수행이다. 초급단계에서 다양한 경제적 요소의 공존은 사회주의생산과 건설에 도움을 주므로 과도기와 다르다.”⁷⁾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대두의 이면에는 역사발전에 대한 새로운 이해와

7) Yu Guang Yuan, "The Economy of The Primary Stage of Socialism," *Social Sciences in China* (Summer, 1988) p.85.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해석의 변화가 깔려 있다. 첫째, 사회주의의 발전은 매우 긴 역사단계이고, 몇단계로 나뉘어 질 수 있다. 즉 “초급단계이후의 단계를 고급단계로 칭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사회주의발전은 여러 단계를 거치기 때문이다.”⁸⁾ 둘째, 자본주의의 충분한 발전단계는 초월할 수 있지만 상품경제의 충분한 발전은 초월할 수 없다. 이는 종래의 자본주의와 상품경제를 동일시하던 관념에서 탈피하여 양자를 분리하여 자본주의발전을 거치지 않고 성공한 중국혁명을 정당화하면서도 개혁, 개방이 불가피한 현실적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입장에서 모택동의 자본주의단계를 초월한 1949년 중국혁명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가? 조자양의 보고에 의하면 다음과 같다.“근대 중국의 구체적인 역사조건아래서, 중국인민들이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전된 단계를 거치지 않고도 사회주의로 나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은 것은 혁명발전문제에 있어서의 기계론이며 우경적 착오의 중요한 인식근원이다. 반면에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키지 않고서도 사회주의 초급단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고 간주하는 것은 혁명발전문제에 있어서의 공상론이며, 좌경적 착오의 중요한 인식근원이다.”⁹⁾

이 논리에 따르면 자본주의가 충분히 발달하지 않은 곳에서 혁명을 기대하지 않았던 마르크스는 우경적 착오를 범하게 되고, 모택동은 사회주의건설기에 좌경적 착오를 범하게 된다. 또 鄧은 사회주의 혁명기에 우경적 착오를 범하게 되어, 생산력증심론에 서 있는 鄧의 논리로는 반식민지, 반봉건의 중국사회에서 어떻게 사회주의 혁명이 승리할 수 있느냐의 난제를 풀 수 없다. 따라서 이런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1. 鄧의 주장은 역사적 단계에 국한되어 생명력을 지닌다고 볼 수 밖에 없다. 즉, 毛澤東의 이

8) 龔育之, “我國社會主義初級段階的歷史地位和主要矛盾”, 『紅旗』, (1987. 第22期), p.2.

9) 趙紫陽, p.11.

론은 후발국의 혁명을 해결하는데 적합하고, 鄧小平의 이론은 사회주의건설에 적합하게 되므로, 毛의 비판적 마르크스주의는 후발국의 혁명을 위한 마르크스주의의 재해석이고, 鄧의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는 혁명후 사회주의 건설과정에 요구되는 재해석이라 할 수 있다.¹⁰⁾ 따라서 중국의 마르크스주의는 역사적 단계와 사회적 조건에 따라 그 강조점이 다르게 적용되면서 발전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의 개혁과처럼 생산력중심론에 기초하여 사회를 설명하게 되면 중국혁명은 필연이 아니라 특정시기의 상황의 산물로 해석되고 후발국의 사회주의혁명은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왜냐하면 생산력을 초월한 사회주의혁명이 가능할지라도 사회주의건설은 불가능하다는 것이 중국의 개혁, 개방을 통해 증명되고 있기 때문이다. 물론 생산관계는 생산력 발전에 조응한다는 마르크스주의의 기본전제가 사회주의권의 초기혁명으로 부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개혁, 개방정책은 다시 생산력에 맞추어 생산관계를 변화시키고 있다. 생산력을 고려하지 않은 인위적인 사회주의적 생산관계로의 개조는 생산력의 정체를 초래했음이 중국의 역사적 경험을 통해 드러났다. 이런 지적은 중국내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예컨대 “과도기총노선은 너무 일찍 제출된 것 같다. 경제가 대단히 낙후한 중국에서는 웅당 하나의 비교적 장기적인 신민주주의 시기를 거쳤어야 했고, 황급하게 個體經濟와 私營企業을 소멸시키지 말았어야 했다. ...사회주의적 개조가 비록 승리하여 완성되었으나 적지않은 후유증을 남겨놓았다. 1950년대의 신중국에서 자본주의가 달성할 수 있는 전생산력은 아직 전혀 완전히 발휘되지 못했다. 광대한 농촌과 내륙을 포함한 허다한 중소도시에서 사회주의는 생산과 교환의 수요를 만족시키기에는 아직 크게 거

10) 엘빈 굴드너에 의하면 마르크스주의해석을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로 구분한다. 이런 개념을 중국의 동소평과 모택동의 사회주의 개념과 연결시켜 설명하는 부분에 관해서는 줄고, “中國式 社會主義로서의 社會主義初級段階論”(석사는문, 1988) 참조.

리가 멀었으며, 사적 자본주의는 아직 사회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했다.”¹¹⁾ 이를 통해 볼 때 성급한 사회주의적 개조가 사실은 불가능하고 특정 생산력의 수준에서는 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이 불가피함을 인정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마르크스의 주장대로 자본주의가 비록 착취의 문제를 지니고 있다고 하더라도 생산력의 발전없이 완전히 제거될 수 없다고 생각된다. 이런 맥락에서 시장경제, 상품경제, 사영경제 등이 자본주의성질의 것임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주의에서도 그것의 이용이 불가피함을 주장한다. 이 경우 자본주의는 생산력의 발전과정에서 필연적 과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사회주의혁명이 특정시기에 순서가 바뀌어 성공할 수는 있을지라도 자본주의적 경제운영방식을 배제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이라 해석된다. 왜냐하면 아직까지 자본주의보다 생산력발전에 더 효율적인 방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런 주장을 뒷받침하는 견해는 중국학자 설모교가 사영경제에 대한 필요성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더욱 명백해지고 있다. “1987년 4월 [중국공상보]의 기자가 내게 인터뷰를 할 때, 노동자를 고용하는 사영기업의 성질을 어떻게 보아야 하는가하고 물었다. 나는 솔직하게 ‘자본주의적 성질’을 갖는다고 대답했다.”¹²⁾ 이처럼 자본주의적 성질을 갖는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는 인정할 수 밖에 없는 것이 중국의 실정이다. 즉, “우리나라는 사회주의의 공유제가 주도적 지위를 점한다는 조건하에서 다양한 경제성분의 동시병존을 허용하는데, 그 속에는 옹당 자본주의적 성분도 포함되어야 한다.”¹³⁾ 이를 통해 볼 때,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은 현재의 개혁, 개방을 정당화하는데는 효과적이지만 그 댓가로 사회주의혁명의 필연성, 정당성을 공격할 위험을 내포하고 있다.

11) 薛華橋,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초급단계로”, 서석홍편역, 「중국사회주의개혁의 진로」, 풀빛, 1990, p.99.

12) 앞 글, p.104.

13) 앞 글, p.104.

한편, 사회주의초급단계론의 제기에 영향을 미친 핵심요소는 과도기개념의 재인식이다. 과도기 개념에 대한 모택동과 덩소평의 견해차이는 현실정책에서 서로 다른 사회주의건설노선을 제시했다. 물론 양자의 노선차이는 마르크스주의에 대한 해석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다. 모택동이 비판적 마르크스주의이해에 기초하여 생산관계와 인간의지를 강조하는 반면에 덩소평은 과학적 마르크스주의이해에 기초하여 생산력증대를 강조한다. 그러나 특히 과도기개념의 차이는 마르크스 자신이 사회주의와 과도기의 개념을 모호하게 사용한 것도 하나의 원론적 차원의 이유이다. 이로 인해 毛와 鄧은 사회주의에 대해 서로 다른 이해를 하게 된다. 모택동과 덩소평의 사회주의개념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모택동의 사회주의 개념은 과도기와 사회주의를 일치시켜 파악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는 매우 긴 역사단계이다. 사회주의사회는 계급과 계급투쟁이 존재하고,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라는 2가지 길의 투쟁이 존재한다. 생산수단의 소유제에 있어서 사회주의혁명만으론 불가능하다.....사회주의라는 역사적 단계에서는 반드시 프롤레타리아 독재를 견지하고 사회주의혁명을 최종까지 견지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자본주의의 부활을 막고 사회주의를 진행시켜 공산주의로 이행하기 위한 조건을 성립시킬 수 없다.”¹⁴⁾

이처럼 모택동은 사회주의의 주요임무로 계급투쟁을 강조하는 반면에 덩소평은 생산력 증대를 강조한다. 덩소평은 과도기는 1956년 사회주의로의 개조로 끝났고 그 이후의 단계는 사회주의초급단계로 보고 사회주의를 다음과 같이 이해한다. “무엇이 사회주의인가? 무엇이 마르크스주의인가? 마르크스주의는 생산력 발전을 가장 중시했다. 우리가 사회주의를 말할때 그 함축된 의미는 바로 능력에 따라 일하고, 필요에 따라 분배받는 것이다. 이것은 바로 사회생산력의 고도한 발전을 요구한다. 따라서 사회주의단계

14) 山内一男, 「中國社會主義經濟研究序說」(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2), pp.67-68.

의 가장 근본임무는 사회생산력의 발전이다.”¹⁵⁾ 즉, 사회주의의 근본임무는 사회생산력의 발전으로서 사회의 부를 증대시켜 인민의 날로 증가하는 물질문화의 수요를 충족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는 빈궁을 없애야 하며 빈궁을 사회주의로 간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개념 차이가 서로 다른 사회주의건설정책을 취하도록 했다.

2. 사회주의상품경제론/사회주의시장경제론

중국의 학자들은 마르크스가 구상한 사회주의사회와 다른 조건에서 혁명을 성공시킨 중국의 특수성을 반영하여 사회주의를 재해석하고 있다. 즉, 사회주의는 자본주의로 이행하는 과도기가 아니라 독립적이고, 자체내에 몇개의 발전 소단계를 가지는 장기적인 과정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주의에 대한 재인식을 바탕으로 사회주의상품경제론이라는 정책을 제시했다.

그러면 상품경제론이 왜 대두하게 되었는가?

산품경제의 사회주의에서 상품경제의 사회주의로 전환할 것을 주장하는 논리는 다음과 같다. 소련에서 70여년, 중국에서 근 40년의 사회주의의 실천은 하나의 공통된 결론을 내려 주었다. 그것은 산품경제(產品經濟)의 사회주의는 우월성을 갖고 있지 못하며, 노동효율과 경제효율 등의 방면에서 산품경제의 사회주의는 상품경제의 자본주의에 미치지 못한다는 것이다. 또 누구도 공공재산을 보호하려 하지 않고 어떻게 해서 공유의 재부를 증가시킬 것인가 하는 데에는 별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오히려 사회주의라는 ‘큰술’에서 뭔가 조금이라도 더 가져 가려고 백방으로 노력할 뿐이다.¹⁶⁾

15)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香港: 三聯書店, 1987), p.46.

16) 翁 영오,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의 동일함을 논함”, 서석홍 편, 「중국사회주의 개혁의 진로」, (서울: 풀빛, 1990), p.134.

이를 통해 볼 때 상품경제가 경쟁을 통해 생산력을 가장 효율적으로 증대시킬수 있음이 인정되고 있다. 또 인간에 대한 기본전제에 있어서 사회주의체제하에서 발생하는 인간의 이기심을 지적하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인간의 경제적 욕구에 동기부여를 해서 생산력을 증대하는 상품경제가 효율적이다.

등소평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사회에 한정되고 자본주의적 시장경제라고 보는 것은 부정확하다. 1985년 미국기업가대표단과의 대화에서 “사회주의는 왜 시장경제라 할 수 밖에 없는가?”를 설명했다. “과거 우리가 했던 계획경제는 당연히 좋은 방법이지만, 전적으로 이 방법만을 쓰는 것은 생산력의 발전을 저해한다.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서로 결합해야 생산력을 해방할 수 있고 생산력 발전을 가속화할 수 있다.”¹⁷⁾

이처럼 생산력증대를 위해 시도되고 있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는 다음의 세가지 면에서의 변화를 주내용으로 한다.

첫째, 소유제면에서 생산수단의 공유제를 기초로 하여 다양한 경제성분을 발전시킨다.

둘째, 분배제면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를 기초로 하고, 비노동소득도 인정한다.

셋째, 경제운영면에서 계획경제와 시장경제를 병행하여 실시한다.

중국은 13全大會에서 “계획적 상품경제론”을 제기했고, 14全大會에서는 더 발전하여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제기했다. 이는 상품경제를 시장경제와 구분하여 계획경제는 상품경제와 결합가능한데, 그 이유는 계획경제와 대립적인 것은 상품경제가 아니라 시장경제라 했던것과 비교하여 개혁, 개방이론의 진전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예컨대 “계획경제와 상품경제는 서로 다른 서열의 방식이고, 그들간에는 직접적인 대립관계가 없다.

17) 劉國光, “關於計劃與市場經濟的幾個問題”, 日山 編, 「著名學者 論社會主義市場經濟」(北京:人民出版社, 1992), p.93.

계획경제는 사회생산조정의 차원이고 그것과 대립적인 것은 무계획적인 시장경제이고 상품경제는 사회생산교환의 차원이고, 자연 혹은 산품경제와 대립적이다. 따라서 상품경제는 다른 사회조건하에서 계획경제와 결합할 수도 있고, 무정부적 시장경제와 결합할 수도 있다.”¹⁸⁾

1992년 14全大會에서는 공식적으로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이 계획경제와 대립적이라 했던 시장경제를 할 수 있고, 지향함을 인정했다. 그러면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석할 수 있는가? 이전의 사회주의상품경제와 무엇이 다른가? 왜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표현으로 ‘사회주의 상품경제’ 혹은 공유제를 기초로 한 ‘계획적 상품경제’의 표현을 대체했는가?

이것은 단순한 용어상의 변화에 그치지 않고 많은 새로운 사상, 관념을 내포하고 있다. 상품경제 발전상황에 대한 인식의 새로운 돌파를 내포한다. 왜냐하면 중국내의 시장경제개념에 대한 이해를 기초로 분석해 볼 때, 상품경제는 부분적으로 사회주의를 보완하면서 존재할 수 있지만 시장경제라는 것은 이런 상품경제가 전사회적으로 확산되었을 때 사용할 수 있는 개념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중국내의 개념이해는 다음과 같다.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표현은 하나의 현대적 개념이고 시대적 내용을 담고 있다. 시장경제의 개념에 관해서는 19세기말 자산계급경제학자의 저작 중 가장 처음 출현했다. 이 이전에 비록 상품경제가 시장과 분리될 수 없었지만 일반인들은 그것을 시장경제라 부르지 않았다. 시장경제란 개념은 우선 경제가 비교적 발달한 자본주의국가내에서 확립된 후 시대적 내용이 부여되었다.

어떤 조건하의 상품경제를 모두 시장경제라 칭하지는 않고, 상품경제의 발전이 일정 고도에 달하여 전사회범위내에서 자원배분을 하는 하나의 통일적 시장이 필요해야만 시장경제라 할 수 있다. 시장경제는 높은 사회화와 시장화의 상품경제다. 그것은 상품경제의 고급단계와 현대적

18) Robert C. Hsu, "Conception of the Market in Post-Mao China," *Modern China* (1985. 10), p.440.

형태이다.¹⁹⁾

이런 맥락에서 본다면 상품경제를 시장경제라는 용어로 바꾸어 표현하는 것은 중국이 상품경제의 발전을 통해 계획경제의 범위가 축소했고, 앞으로 더 축소해야 함을 내포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것은 또 시장의 광범위한 발전을 지향함을 의미한다. 이런 생각은 다음의 견해에 의해 더욱 명료하게 드러나고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우리가 바라는 발전한 상품경제는 일반적인 의미의 상품경제가 아니고 고도로 사회화된 시장화의 상품경제이고, 모든 경제활동이 모두 시장체제, 혹은 시장관계에 들어감을 의미한다.”²⁰⁾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주의시장경제’ 표현의 의미는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가 바라는 발전한 경제는 바로 시장경제이고, 우리가 건립하려는 경제체제도 바로 시장경제이다. 정부부문은 행정명령을 통하여 직접 기업에 간여하지 않고, 보다 다양하게 경제 지렛대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기업에 대해 조절과 통제를 한다.

둘째,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표현은 중국의 경제체제의 속성이 공유제를 주체로 한다는 사회주의적 성질을 지니면서 시장경제적 속성을 지님을 의미한다.

셋째, 사회주의도 시장경제일 수 있다고 해도, 시장경제도 결합이 있으므로 계획을 통해서 수정되어야 함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²¹⁾

이처럼 상품경제가 계획경제를 보완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않고 시장경제를 표방하고 나선다면 중국은 정치적으로는 사회주의이념을 주장하더라도 경제운영방식에서 사실상 자본주의와 별로 다를것이 없어져 간다고 생각된다. 더 나아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개념이란 정치적 개념이 아니라 경제체

19) 官希魁, “論社會主義市場經濟的理論創新”, 「新華文摘」(1992. 12), p.41.

20) 같은글, p.42.

21) 같은글, p.43.

제의 특성을 설명하는 개념이라는 것을 고려해 볼때 정치적으로는 4항견지 등을 내세우며 사회주의를 주장하더라도 핵심은 이미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이탈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시장경제를 표방하는 사회주의국가가 마르크스가 지적했던 시장경제의 문제들, 즉, 자본주의체제의 기본모순을 피할 수 있는가? 시장경제에 대한 인정은 결국 마르크스가 상품분석을 통해 자본주의를 비판했던 것을 부정하는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시장경제가 지닌 모순이 사회주의에서도 나타나더라도 지금 상황에서는 생산력증대를 위해 불가피하다는 것인가? 또 사회주의의 기본목표가 생산력 증대이므로, 만일 사회주의체제가 생산력증대를 위한 시장의 발전에 방해가 된다면 포기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러면 무엇을 위한 생산력증대인가? 인민의 생활이 향상될 수 있다면 어느 이념을 지향하더라도 상관없다는 것이 중국인의 사유라 생각한다. 왜냐하면 이념은 목표가 아니라 강대중국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으로 도입되었기 때문이다. 사실상 경제개혁의 실행결과가 경제를 발전시키고 사회주의의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라는 주장은 경제개혁과정에 비추어 문제를 지니고 있다. 자본주의적 방식의 도입이 경제발전을 이룩할지라도 사회주의의 강화로 이어질 것인가? 오히려 경제발전의 댓가로 사회주의적 성질의 악화를 감수해야 할 것이다.

중국내에서도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실시를 둘러싸고 “姓‘資’ 姓‘社’”논쟁이 있었다. 여기서는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세가지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비판적으로 그 성격을 분석해 보려 한다. 이를 통해 중국식 사회주의가 탈사회주의화과정에 있음을 밝혀보려 한다.

첫째, 사회주의국가의 시장경제를 어떻게 해석하고, 계획과 시장은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둘째, 공유제를 기본으로 한다는 사회주의국가에서 개체경제와 사영경제는 어떤 성질을 지니는가?

세계, 분배의 과정에서 효율과 평등의 조화가 어떻게 가능한가?

이 세가지 문제를 중심으로 사회주의상품경제, 혹은 사회주의시장경제로 지칭되는 개혁, 개방기의 중국의 경제발전정책을 분석해 보려 한다.

III. 사회주의 시장경제론 분석

1. 계획과 시장의 조화

개혁, 개방이후 경제체제의 목표모델탐색의 핵심문제는 계획과 시장의 관계를 어떻게 정확히 인식하고 처리하느냐이다. 1984년 12期 3中全會에서 사회주의경제로 계획적 상품경제라는 것을 제출한 후에도 사람들의 견해는 일치하지 않았다. “계획적 상품경제”에 대해 어떤이는 ‘계획적’인 면을 강조하여 계획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 특징이라 생각했다. 또 다른이는 ‘상품경제’의 면을 강조하여 상품경제야말로 공유제, 노동에 따른 분배와 마찬가지로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 특징이라 생각했다.²²⁾

더 나아가, 최근의 하나의 문제는 ‘사회주의 상품경제’를 ‘사회주의 시장경제’나 ‘계획적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느냐이다. 사회주의시장경제를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있었다. 이 논쟁은 주로 두가지 견해로 분류된다. 첫째, 상품경제와 시장은 불가분의 관계를 가진다는 견해가 있다. 사회주의경제가 ‘계획적 상품경제’라 여긴다면 당연히 사회주의경제는 ‘계획적 시장경제’라 할 수 있다. 예컨대 馬洪이 1988년 출판한 [사회주의초급단계의 시장경제]의 서문에는 “우리는 개혁을 통해 사회주의 계획적 상품경제를 건설하고자 하고, 그것은 거시관리와 함께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경제

22) 劉國光, “略論社會主義市場經濟”, 「新華文摘」(1992. 12), p.39.

다. 나는 이런 의미에서 사회주의시장경제라 부를 수도 있다고 생각한다.”
고 밝히고 있다.²³⁾

반면에 둘째, 시장경제는 제도적 성격을 지닌 개념이라 보고, ‘시장경제’는 ‘상품경제’와 다르고, ‘시장’이 있고, 혹은 ‘시장조절’이 있는 것은 시장경제와 다르다고 본다. 이들은 해외에서도 중앙계획경제의 국가를 사회주의국가로 보고, 시장경제국가를 자본주의국가로 본다고 주장하면서,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개념사용을 반대한다. 그들에 따르면 시장경제는 사유제를 기초로 하는 것이고,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조건하에서만 상품경제는 시장경제일 수 있다. 이와 비슷한 견해로 1989년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자산계급 자유화로 보고 반대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즉, “시장경제는 자본주의사유제를 기초로 하는 조건에서만 가능하고 사회주의와는 결합불가능하다. 시장경제를 사회주의사회의 목표모델로 하는 것은 자산계급자유화이고 중국경제제도의 성질을 변화시키는 것이다.”²⁴⁾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 시장경제가 제도적 성격을 지녔다는 것을 비판하는 것으로써, 시장경제를主義나 制度和 분리시킨다. 즉, “시장경제는 사회제도가 아니고, ‘주의’도 아니다. 그것은 어떤 사회제도나 어떤 주의의 속성을 지니지 않고, 자원배치와 경제운행의 방식이다. 또 생산의 방식이고, 생산과 교환의 방식이다.”²⁵⁾

薛暮橋등의 적지않은 경제학자들은 여전히 첫째의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예컨대, 1991년 설모교는 “시장조절과 시장경제는 본질적으로 서로 같다. 모두 자본주의와 같다고 할 수 없고, 생산수단공유제를 주체로 함을 견지한다면 자본주의시장경제라 말할 수 없다.”고 했다. 점점 더 많은 사

23) 劉國光(日山 編), 뒷글, p.91.

24) 薛暮橋, “關於社會主義市場經濟問題”, 日山 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北京:人民出版社, 1992), pp.5-6.

25) 林子力, “現代市場經濟和現代社會主義”, 日山 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北京:人民出版社, 1992), p.106.

람들이 계획과 시장의 문제를 자원배치의 방식으로 보고, 경제운영의 방식의 문제로 볼 뿐, 그것을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구분하는 문제로 보지 않는다.²⁶⁾

이처럼 시장경제에 제도적 성격을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는 이들은 공유제를 기준으로 체제를 구분하려 한다. 그러나 그것도 곧 한계를 노출시킬 수 있다. 왜냐하면 공유제 역시도 시장경제가 도입되면 무너질 수 밖에 없다. 점진적으로 부분적 사유를 인정하게 되면 공유의 부분이 축소될 수 밖에 없다. 결국 중국은 사회주의의 재해석을 명분으로 하여 현실의 변화를 설명하고,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사회주의자체의 포기를 진행시키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아니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나하는 논쟁자체가 무의미해지는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생각된다. 어떤 체제로 가느냐라는 문제제기를 하기전에 우선 생산력을 증대하여 발전한 자본주의의 경제발전을 따라잡으려는 것이 중국정치인들의 생각일 것이다. 이 과정에서 부강한 중국건설을 위해 도입되었던 사회주의이념은 현대에 와서 강력한 사회주의건설이라는 명분하에 서서히 포기되어가고 있다.

상품교환이 있게 되면 당연히 시장경제일 수 밖에 없고 사회주의경제도 시장경제라 할 수 있다는 것은 중국의 일반적 견해라 생각된다. 예컨대 “계획적 상품경제로 된 이상 반드시 상품교환이 있고, 시장이 있다. 상품경제의 기본조절자로 여겨지는 가치법칙은 시장메카니즘을 통해 그 작용을 발휘한다. 사회화대생산이 발전하여 상품경제가 전사회로 확산될때, 시장메카니즘은 필연적으로 사회자원의 합리적 배치역할을 한다. 따라서 사회화대생산 조건하의 상품경제도 역시 시장경제이다. 중국경제체제개혁의 실질은 시장메카니즘을 기초로 하여 자원을 배치하는 것이다. 그러면 사회주의 경제도 시장경제라 부를 수 있다.”²⁷⁾

26) 劉國光(日山 編), 윗글, p.92.

27) 薛暮橋(日山 編), 윗글, p.6. 사회주의경제가 시장경제라 할지라도 시장은 계획

이처럼 사회주의시장경제를 인정하는 경우 각 시대를 구분하는 일관된 척도가 사라지게 된다. 봉건제와 자본제는 모두 사유제라는 공통점이 있지만 양자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장경제나 자연경제나 다르다. 그러나 위의 논리에 따르면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기준은 시장경제나 계획경제나 경제운영방식이라 할 수 없다. 위에서 밝힌 바처럼 중국은 사회주의를 표방하고 있지만 시장에 의해서 자원이 분배되고 유통이 이루어지는 시장경제를 시도한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 모두 시장경제를 공통의 기반으로 지향하고 있다. 중국내의 견해에 의하면 공유나 사유나 하는 소유제에서만 두 제도는 구분가능하다. 그러나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근거인 공유제라는 것도 시장의 효율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점차 다양한 소유형식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특히 중국은 생산력의 발전수준이 낮으므로 공유제 외에도 개체경제나 사영경제를 인정하여 생산력증대에 가장 효율적일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본다면 현재 중국은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속성을 공유하고 있지만 변화의 결과는 기존의 사회주의에서 벗어나는 탈사회주의화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생산관계나 경제체제 是非의 판단기준은 생산력의 신속한 발전, 인민생활향상에 유리하나 여부이다. 따라서 생산력증대에 유리하다면 체제의 변화는 당연한 귀결이다. 저명한 경제학자 리홍린(李洪林)은 1988년 중반기 한 논문에서 사회주의는 중국에서 끝났다고 분명히 선언했다. 그가 암시한 바로는 중국의 사회주의는 경쟁을 제거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에 의해 조절되는 것이므로 상호 배타적이다. 여기서 문제는 시장과 계획을 어느선에서 조절하느냐이다. 이것은 다음의 내용을 의미한다. “만일 정부의 통제가 거시적 범위를 넘어선다면, 즉 각 경제조직의 활동에 간여한다면 그것은 바로 시장경제체제를 취소하는 것이다. 이는 시장과 계획이 상호 결합될 수 있을 지라도 이는 서로 배타적임을 나타내고 있다. 즉 시장의 지나친 확산은 계획적 통제를 약화시키고 계획의 일관된 강조는 시장의 활동을 방해하여 생산력의 증대를 불가능하게 한다.” 于光遠, “市場經濟體制下的計劃調控”, 「新華文摘」, 1992. 12. p.44.

유일한 탈출구는 현실을 직시하여 시장에서 경쟁이 성공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결국 현 중국이 표방하는 생산력 증대는 제 3세계의 근대화전략과 별로 다를 것이 없다. 국가 주도의 현대화를 하고 있고 그 지도이념으로 사회주의 시장경제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현실의 변화는 그 현실을 설명하는 개념의 변화를 수반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이상 중국을 사회주의라는 틀내에서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다. 다만 사회주의를 표방하는 한 사회주의 틀로 비판받을 수 있을 뿐이다.

위에서 살펴본대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 모두 시장경제라는 산업사회의 경제적 기초를 공유하고 있다면 자본주의의 대안으로서의 사회주의는 포기 되는 것이고, 사회주의가 지닌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의 기능도 소멸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왜냐하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이 상품경제, 시장경제에 대한 비판인데 사회주의도 이런 요소들을 공유한다면 자본주의에 대한 비판은 곧 사회주의에 대한 비판이 되기 때문이다. 그러면 왈러스타인의 세계 체제론이 적용되어 가고 있는가? 그는 세계를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로 구분하는 것에 반대하고 세계는 단지 시장경제라는 하나의 체제에 속해 있다고 한다. 양 체제의 이념적 차이를 인정하지 않는 이런 설명이 현재의 중국의 변화와 사회주의권의 와해로 점차 설명력을 지닐 수 있다고 생각된다.

1985년 등소평도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를 모순적으로 보지 않았다. 즉, "문제는 어떤 방법을 이용해서라도 사회생산력을 더욱 유효하게 발전시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구분은 계획이나 시장이 아니다. 계획 경제는 사회주의와 같은 것이 아니다. 시장도 자본주의와 동일하지 않다. 자본주의에도 계획이 있고, 사회주의에도 시장이 있다. 계획과 시장 모두 경제조절의 수단이다."²⁸⁾ 이런 논리에서는 계획이 많으나 시장이 많으나 는 더이상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기준이 될 수 없다.

28) 薛暮橋(日山 編), 위글, p.7.

중국의 개혁, 개방이 성공할수록 사회주의공유제와 레닌주의적인 일당독재는 지양해야 할 것이다. 반대로 원론적 의미의 사회주의이념을 강화할수록 경제발전은 지연되고 시민의 욕구는 충족될 수 없다. 이런 상황에서 중국인이 무엇을 택하겠는가? 이념의 순수성을 지키기위해 현실에서의 경제적 낙후를 감수하려 할 것인가? 결국 필요하다면 기존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서라도 경제발전에 가장 효율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현재 중국의 문제는 분배의 공정성이전에 나눌 물품의 효율적인 생산이다. 이를 위해서는 文革期の 잘못된 사고로부터 해방되어야 한다는 것이 중국내의 지배적 견해다.

구체적으로 개혁파가 지적하는 문혁기 사고의 한 단편이라 생각되는 '指令性計劃이 '社'인가 '資'인가?'에 대한 비판은 다음과 같다.

"計劃의 姓은 社이고, 市場의 姓은 資"라는 이론에 사로잡혀, 사회주의경제중 시장을 이용하면서 지령성계획을 병행하는 것을 반대하여, 시장경제를 실행할 수 없었다. 시장을 이용하되 단지 지령성계획을 보조할 수 있는 정도로만 제한했고, 지령성계획을 대신하여 시장이 자원을 배치하는 수단이나 방식으로 되는 것은 바로 "시장사회주의"를 실행하는 것이고 실제상 자본주의를 실행하는 것이라 여겼다.²⁹⁾ 이처럼 시장경제의 도입은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화라는 것이 문혁기의 기본생각이었다.

위의 지령성계획이 社이지 資가 아니라는 입장의 잘못된은 자본주의시장경제 중 지령성계획을 실시할 수 없다는데 있는 것이 아니고, 지령성계획에 '社'의 사회제도 속성을 부여한데 있었다. 그래서 지령성계획은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 특성이고 사회주의경제는 반드시 지령성계획을 실행해야 하고, 그것의 취소는 사회주의경제를 부정하고, 자본주의경제로 변하는 것이라 여기는데 있었다. 이런 입장은 지령성계획의 대립물인 시장도 사회제도의 속성을 지니고, 그 姓은 '資'이고, 시장은 자본주의경제의 調節者라

29) 같은 글, p.175.

생각했다.³⁰⁾ 이러한 원론적 의미의 사회주의를 고수하려는 문혁기의 사고에 대한 중국내의 결론은 현대화를 위한 사상해방이다.

즉, “개혁, 개방의 속도를 가속화하고 姓‘社’, 姓‘資’의 추상적 논쟁으로 인해 자신의 사상과 손발을 속박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개혁, 개방은 중국사회주의현대화실현의 필연적인 길이다. 개혁, 개방을 통해서 한층 사회주의제도를 완성하고 생산력을 해방, 발전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우리나라 경제와 모든 사회주의 사업발전정도에 중대한 문제를 지닌다.”³¹⁾

결국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의 제기를 통해 시장경제의 범위가 넓혀지더라도 그것은 사회주의경제로 설명가능해지는 동시에 실제적으로는 사회주의 경제의 속성을 벗어날 수 있게 될 것이다. 시장경제에 대한 사회주의경제적 속성의 부여는 앞으로 시장경제가 장기적으로 공존할 것임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2. 公有制와 私營經濟의 造化

사회주의의 핵심이 공유제이고, 소유제도는 자본주의와 사회주의제도를 구분하는 척도라고 중국의 개혁파들도 인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중국은 個體經濟와 私營經濟를 도입하고 있는가? 이것은 생산력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즉 모택동시기에 생산력수준은 고려하지 않고 무조건 공유제의 확대만을 사회주의라고 생각하여 실시한 결과 경제적 정체를 초래했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개혁파들은 사회주의공유제의 우월성의 기준은 공유제의 크나 高低에 있는 것이 아니라 공유제 형식이 생산

30) 董輔弢, “論市場和社會主義市場經濟”, 日山 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p.173.

31) 蘇文生, “全面推進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偉大綱領”, 「新華文摘」, 1992. 12, p.5.

력발전에 적합하나 여부에 있다고 생각한다. 다음에서는 사영경제에 대한 개혁파들의 견해를 소개하려 한다.

흔히 말하길 전민소유제경제와 집체는 사회주의성질의 것이고, 三資企業, 사영경제는 '사회주의의 보완'이라 한다. 즉 여기서 후자는 본질상 사회주의성질이 아니다. 문제는 공유제경제가 비록 사회주의성질이라 해도 사회주의사회의 일정한 발전단계상 공유제가 많을수록 좋다고만 볼 수는 없다. 또 사유고용경제, 삼자기업은 비록 자본주의성질이고 국가자본주의성질이지만, 사회주의의 일정발전단계에서 적을수록 좋다고 볼 수만은 없다. 소유제 구조는 단지 생산력의 발전에 근거해서만 선택될 수 있다. 따라서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구별하는 근거인 사회주의공유제는 생산력의 발전없이 실현불가능하다.

그러면 사영경제가 사회주의에서 어떤 지위를 점하고 있는가? 또 왜 필요한가?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의 본질적 특징으로 인정되고 있다. 즉, "개체, 사영경제는 사회주의사회경제의 구성부분이고 '보완적'인 것이다. 사회주의경제는 공유제경제와 비공유제경제 두 부분으로 구성된 것이다. 비공유제경제인 개체, 사영경제의 작용과 공유제 경제인 국영, 집체의 작용은 마찬가지로 모두 사회주의경제의 구성부분이다. 양자는 분리 불가능하다. 개체, 사영경제는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조성부분이고, 그것을 공유제 경제의 보완으로만 생각할 수는 없다. 사회주의의 본질적 특징의 하나는 공유제를 주체로 하여 다양한 경제성분이 병존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경제 중 공유제경제는 주체적 지위를 점하고, 개체, 사영경제 등 비공유제 경제는 종속적 지위를 점한다."³²⁾ 이런 주장은 개체, 사영경제는 특정시기의 일시적 조치로서 폐지되어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던 것과는 입장의 변화를

32) 陸學藝, 張厚義, "個體私營經濟健康發展的幾個問題", 「新華文摘」1992. 12, p.48.

보여주는 것이다.

개체, 사영경제의 존재와 발전은 사회주의의 장기적 방침이고, 일시적 대책이 아니다. 어떤이는 현단계의 사영경제와 구사회의 사영경제가 큰 차이가 없고 단지 사회생산력발전수준이 높지 않고, 국가재정자금이 부족한 조건하에서 할 수 없이 잠시 사영경제의 적극성을 이용한다고 여긴다. 그러나 “실질상 개체, 사영경제는 모든 사회주의경제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고, 사회주의조건하의 개체, 사영경제의 발전은 일시적 대책일 수 없고, 전략적 조치이다. 개체, 사영경제는 시장경제발전의 유효한 형식이다. 모든 사회주의사회에서 개체, 사영경제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뿐만 아니라 적극적으로 발전시켜야 하는 것이다.”³³⁾

물론 중국의 이론가들은 사영경제가 생산수단의 사적소유와 자본-임노동 관계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따라서 그 이윤 속에는 잉여가치의 착취부분이 포함되어 있다는 점 등에서 이것이 분명히 자본주의적 성질을 지니고 있다는 점을 인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회주의국가인 중국에서 허용, 장려되고 있는 이유는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즉, “중국에서의 사영경제는 질적, 양적으로 압도적 우위를 점하고 있는 공유제경제와의 관계속에서 그 영향을 받으며, 또 인민민주독재 국가정권의 지도, 감독과 국가계획 부문의 경제적 행정적 지도를 받아 그것이 갖고 있는 부정적 요소(생산의 무정부성, 잉여가치의 착취와 빈부격차의 발생, 양극분화의 경향성 등)는 최소한으로 억제될 수 있는 반면에 다음과 같은 긍정적 역할을 한다.

i) 개인의 유희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여 생산과 건설을 촉진하고 ii) 이를 통해 도시와 농촌지역에 존재하는 방대한 잉여노동력에 새로운 취업 기회를 제공하며 iii) 소비자금을 생산자금으로 전환하여 현재 중국에 심각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하고 iv) 공유제경제가 담당할 수 없는 국민경제의 빈 공간을 파고들어 인민들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켜주고 v) 민활하고

33) 같은 글, pp.48-49.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통해 공유제경제에 경쟁압력을 넣어 경제전체와 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초급단계 하의 낙후된 생산력발전에 크게 기여한다. 따라서 사회주의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일정한 한도내에서 이것을 적극적으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³⁴⁾

그러면 이처럼 사영경제가 자본주의의 부정적 성질을 사회주의사회에서 나타내지 않으면서 긍정적 역할만을 한다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에 대한 중국내의 견해의 근거는 다음 두가지다.

첫째, 현대 중국사영업주의 수입으로 보아 그는 노동자와 착취자의 양면을 지닌다. 그의 착취정도는 자본가에 비해 낮기 때문에 축적의 규모도 작고, 축적의 속도도 느리다. 착취, 축적, 재착취, 재축적의 순환을 통해 무궁한 자본축적의 법칙을 형성하기 곤란하다.

둘째, 자본축적의 법칙에서 자산계급재부의 축적은 무산계급빈곤을 기초로 한다. 이것은 계급모순과 계급투쟁의 경제적 근원이다. 그러나 현대 중국사영업주의 축적은 사회적 기능이 자본주의와 다를 뿐 아니라, 노동자의 빈곤누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다.³⁵⁾

그러나 자본주의의 재평가에서 계급투쟁의 약화를 지적한 것으로 미루어 보아 자본주의의 자본축적이 일방적으로 노동자의 빈곤을 전제로 한다고만은 볼 수 없다. 자본주의발전은 노동자의 생활수준도 향상시킨다. 한 예로 왜 노동자의 빈곤누적을 전제로 하지 않는 사회주의보다 자본주의의 노동자들의 생활 수준이 더 높은가? 또 사영업주의 자본축적의 사회적 기능이 어느면에서 자본주의와 다른가가 설명되지 않았다. 문제는 사회주의하의 빈곤의 평등보다는 상대적으로 불평등하더라도 절대적인 생활수준이 향상되기를 인민들이 바란다는 것이다.

34) 서석홍, “중국 경제체제개혁의 이론적 기초”, 「중국사회주의 개혁의 진로」, (서울: 풀빛, 1990), p.23.

35) 張之光, 万桂蘭, “試論當代中國私營經濟的性質問題”, 「新華文摘」, 1992. 12, p.46.

사회주의사회에서 私營經濟의 성질문제에 관한 구체적 논의는 착취론과 무착취론으로 집약될 수 있다.

먼저 무착취론은 주로 사영업주의 수입구성으로 이 문제를 설명한다. “사영업주의 수입은 일반적으로 재산수입(소유권수입), 경영수입, 위험수입, 등급상의 격차수입을 포괄한다. 이는 모두 상품경제조건하의 공통적인 수입형식으로 착취가 아니다. 결과적으로 사영기업중 고용주와 고용인 사이에 착취가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왜 상품경제조건하의 공통적인 수입은 착취가 아닌가? 즉, 상품경제에서 자본가의 수입이 착취를 기반으로 한다고 하면서 왜 자본가의 수입과 같은 종류에 속하는 사영업주의 수입은 착취가 아닌가? 그러면 어떤 수입에 의한 자본축적이 착취인가?

위의 견해에 대한 반론으로 사영업주의 수입과 공유제기업의 수입의 성질을 비교하면서 제시하는 착취론은 다음과 같다. 사영업주의 재산수입중 착취가 존재한다. 이 문제는 두 방면에서 분석가능하다.

첫째, 사영업주의 재산수입과 공유제기업이 획득한 주식배당금과 이자수입은 질적 차이가 있다. 전자는 노동자의 잉여노동을 점유하는 것이고, 후자는 국민수입재분배중 획득한 상여금이다.

둘째, 사영업주의 재산수입과 공유제기업이 획득한 주식배당금, 이자수입은 같은 백분비가 아니다. 전자는 후자보다 높다.

위에서 문제는 공유제기업의 수입은 착취가 아니라는 전제에서 사영기업의 수입의 성질만을 설명하려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시장경제가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는 설명을 받아들인다면 공유제 기업도 시장경제하에서 움직이는한, 공유제 기업의 수입도 착취에 기반하고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러나 공유제 기업의 수입은 어떻게 쓰여지는가? 재산의 소유주가 개인이 아니라 전인민이므로 전인민을 위해 수입이 재분배된다면 착취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처럼 그 성질에 있어서 논란이 있는 사영경제가 실제로 전체경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어느 정도이고, 그 역할은 어떠한가?

“1992년 들어 사영경제는 발전속도도 빠르고, 경제사회구조중의 지위와 작용도 더욱 현저하다. 취업인구수로 보아 1991년 개체호, 사영기업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국 전민소유제와 城鎮集體所有制 직공수의 17.1%에 해당하고, 전국 사회노동자 총수의 4.2%를 점한다. 사회상품총액의 구성으로 보면, 1991년 전국 개체호의 사회상품소매액은 전국상품소매총액의 19.6%를 점한다. 사회공헌으로 보면, 1991년 개체호, 사영기업 납세액은 전년에 비해 22.9%증가했고, 전국 각 항목세수총액의 6.0%이고, 어떤 縣, 市는 50%이상에 달한다. 이러한 개체, 사영경제의 회복과 발전은 생산을 촉진하고, 유통을 활성화하고, 시장을 확대하고, 경제를 번영시키고 취업을 증가시켜, 인민군중의 물질문화생활의 다방면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적극적 작용을 한다.³⁶⁾

또 국영경제와 개체, 사영경제의 비중의 변화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국민경제 중 근래들어 국영경제와 개체, 사영경제가 점하는 비중의 변화가 비교적 크다. 1990년, 전국공업총생산액은 전년에 비해 7.76% 성장했으나 구조상 보면 국영공업의 증가는 2.96%, 집체공업은 9.02%, 개체, 사영공업은 21.11% 증가했고, 三資企業은 39.33%가 증가했다. 전민소유제공업의 전공업총생산액중의 비중은 1980년 76.0%, 1985년 64.9%, 1990년 54.6%를 점한다. 이런 전민소유제축소상황의 주요원인은 개체, 사영경제가 국영경제에 충격을 주어 국영경제가 활력을 잃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을 개선하는 관건은 국영기업의 경영방식을 전환하여 효율성을 증대하고 경제적 우월성을 발휘하는 것이다. 사영, 개체경제의 발전을 제한하여 국영경제의 우월성을 보호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³⁷⁾

위의 통계를 볼 때, 점차적으로 개체호나 사영경제의 비중이 강화되고 있

36) 陸學藝, p.48.

37) 같은 글, p.49.

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국영경제가 점차 개체, 사영경제에 의해 잠식당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체, 사영경제의 확산을 막을 것이 아니라 국영경제의 운영방식을 개선하여 경쟁력을 높여야 한다. 즉, 이념고수를 위해서는 효율성을 상실할 수 밖에 없으므로 국영경제의 운영방식을 자본주의적으로 전환할 수 밖에 없다. 이 결과 국영기업도 소유권은 국가에 있으나 경영방식은 자본주의적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그러면 사영경제의 비율증가는 점진적으로는 사회주의의 성격변화를 진행시키지 않는가? 중국내 견해에 따르면, 사회주의국가는 법률, 법규를 통해 사영경제를 감독, 관리해서 건전한 발전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영기업과 관련된 법규규정에 따라, 사영기업이 납세 후 생산에 투자하는 이윤은 50%이상이고, 개인수입조절세징수를 면제한다. 그 목적은 사영기업의 생산경영규모를 확대하는 것이다. 기업의 규모가 클수록 노동력의 안배가 많아지고, 국가에 내는 세금도 많아진다. 또 창출한 사회재부도 많아진다. 사유나 공유의 생산자료 모두 사회주의국가를 위해 재부를 창출한다. 그것은 공동적으로 사회주의의 물질적 기초를 이룬다.

둘째, 높은 소비를 제한하고, 낭비를 막기 위해서, 사영기업의 세금후 개인생활소비에 이용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누진세율(累進稅率)을 적용한다. 40%의 개인수입 調節稅를 징수하고, 개인소비부분이 많을수록 조절세는 더욱 무거워진다. 억만부호가 출현했지만 우리는 稅收조절(稅收調節) 예컨대 재산이전세 제정과 같은)을 통해서 사영기업경영자의 사유재산에 대해 여러차례의 재분배를 할 수 있다.

셋째, 사영기업과 공유제 등 기타경제형식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은 공동번영의 길이다. 형식은 공동출자와 공동경영이다. 사영기업의 규모가 커질수록 직면하는 곤란이 커지므로 이런 연합에 대한 필요가 증가한다.³⁸⁾

38) 같은 글, p.49.

이처럼 사영경제를 사회주의이념에 맞게 조절, 통제한다고 하지만 아무리 사영경제를 국가가 통제한다하더라도 한계가 있고, 시장의 논리를 벗어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적 성격을 나타내리라고 본다.

또 국영기업이 국가경제의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에서 국영기업의 개혁은 중국경제발전의 관건이다. 따라서 소유주는 국가이지만 그 운영방식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와 다를바가 없다. 국영기업도 상품을 생산하고 다른 사영, 개체경제와 마찬가지로 더 많은 이윤을 얻으려 한다. 그렇지 못하면 개체나 사영경제와 경쟁에서 뒤떨어져서 점차 국영이 아니라 사영으로 변화할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소유주는 국가일지라도 생산의 목적은 자본주의 대기업과 마찬가지로 이윤의 극대화라 할 수 있다. 사회주의국가의 국영기업이나 자본주의국가의 대기업이나 다를바가 무엇인가? 문제는 이윤의 극대화 후 중국은 재분배 과정에서 자본주의와 달리 경제적 소득차를 줄일 수 있느냐이다. 효율적인 생산력 증대후 공평한 재분배를 통해 계급분화를 막을 수 있다고 현재 중국의 학자들은 생각한다. 그러나 계층화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결국 경제적 인센티브를 부정하는 결과를 초래하여 생산력 증대에 방해가 된다. 따라서 재분배의 과정에서도 투자증대를 위해서는 계층화를 인정할 수 밖에 없다. 결국 사회주의가 표방했던 순수한 계획경제, 공유제, 경제적 평등은 적어도 현재의 상황에서는 현실성이 없다. 개혁, 개방이 성공한 후 중국이 어떤 사회로 나타날지는 아무도 모르지만 현재의 조건으로 미루어 보아 다른 선진 자본주의국가와 별로 다를 것이 없다는 것이다.

3. 효율과 평등의 조화

사회주의시장경제론하의 분배제는 노동에 따른 분배외에도 비노동수입도 인정한다. 비노동소득에는 예금이나 채권구입에 의한 이자수입, 일부 주식

회사기업이 발행하는 주식구입을 통한 배당금수입, 기업경영자의 수입에 포함된 위험부담금, 임노동을 고용하여 얻은 사영기업주의 착취수입등이 포함된다. 더 나아가 비노동수입이 착취일지라도 실업보다는 실업자를 취직시켜 자본가의 착취를 받게하는 것이 낫다는 것이 중국의 학자 설모교의 생각이다. “국가가 현재 많은 사회주의기업을 설립하여 그들을 흡수해 취업시켜 줄 수 없다면, 그들이 사영기업에 가서 노동하고 사회를 위한 재부를 창조하는 것을 무엇 때문에 막아야 하는가?”³⁹⁾

이런 주장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생산력발전에 필요하다면 어떤 체제의 속성을 지니느냐의 성질문제는 논외로 된다는 것이다. 이런 맥락에서 사영기업주가 많은 노동자를 고용하고 연간 이윤이 많은 것을 보고 자본주의의 부활을 우려하는 견해에 대해 ‘자본주의’나 ‘착취’와 같은 용어도 그 관념을 갱신해야 한다고 주장되고 있다. 즉 “그것이 생산력의 발전에 유리하고 또 노동인민의 이익에 유리하다면 마땅히 환영해야 한다”⁴⁰⁾는 것이다. 문혁시기에는 개체경제(소수공업과 소상업), 심지어는 농민의 가정부업경영조차도 ‘자본주의의 꼬리’로 간주되던 것을 생각할 때 상황의 변화가 사고의 전환을 수반함을 절감할 수 있다.

그러면 시장경제의 도입이 평등이라는 사회주의이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 시장은 경쟁을 전제로 하고, 경쟁은 강한 경제적 동기부여와 연결된다. 자본주의는 사유제를 기초로 하고 재산소유는 수입격차의 중요한 원인이다. 시장경제의 결과는 수입차이를 확대하는 반면에 시장에서의 경쟁을 고무한다. 따라서 자본주의시장경제에서 시장은 정상적일 수 있고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그러면 사회주의시장경제의 상황은 어떠한가? 수입의 공평분배실현은 사회주의의 기본적 요구이고 공유제를 건립한 중요목적이 수입의 공평분배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수입의 공평한 분배는 시장

39) 薛暮橋 (서석홍 편역), 뒷글, p.105.

40) 같은 글, p.105.

주의사회에서는 장기간 양극분화가 존재할 것이라 한다.⁴⁴⁾ 물론 통해 볼 때 노동에 따른 분배로 인한 계층화는 인정하지만, 착취에 기반을 둔 계급 분화와는 다르다는 주장이다. 예컨대 “많은 富豪가 생겨난다고 하더라도 그들을 부르조아계급이라고 불러서는 안된다. 왜냐하면 그들은 사회주의 사회에서 육성된 먼저 풍족하게 된 선구자들인 것이며, 마르크스가 규정한 ‘자본가’ 개념과는 부합되지 않기 때문이다.”⁴⁵⁾라는 것에서도 이것이 증명된다.

상해 사회과학원 연구원 錢世明 역시 인민의 ‘선부’(先富)장려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이 어떻게 조화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이론적으로 분석했다. 공유제경제 속에서 일부의 직원, 노동자가 먼저 부유해 질 수 있는가?에 대해 그는 “노동에 따른 분배를 통해서 소득격차를 확대시켜 ‘선부’(先富)는 실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극히 개별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돈을 벌어 지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⁴⁶⁾

자본주의사회의 자본가 수준은 아니더라도 먼저 부유해지는 것을 인정하는 것은 사회주의의 목표인 공평분배와는 거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공정’은 사회주의 기본원칙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산품경제체제하에서는 효율을 희생한 대가로 얻은 공정이요, 그 결과는 단지 저하된 생산력상태하의 장기정체일 뿐이고 빈공의 평균화에 불과하다. 공정이 모든 사람들의 빈공으로 왜곡된 것이다. 더욱이 산품경제체제는 경쟁메카니즘을 배제했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나태한 습성을 기르고 부패를 만연시켰다.”⁴⁷⁾

44) 王若望, “양극분화에 대한 나의 견해”, 강인덕 編, 『中國主要論文選集』, (서울: 국동문제연구소, 1988), p.604.

45) 같은글, p.606.

46) 전세명, “사회주의 초급단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에 관한 세가지 문제”. 『중국사회주의개혁의 진로』 (서울: 풀빛, 1990), p.117.

47) 옹영오, 앞의글, p.135.

물론 평균주의에서 시장경제체제로 가는 과도기에는 수입차이는 반드시 있기 마련이고, 이것은 허용될 뿐 아니라 사회주의시장경제의 형성, 발전에 유리하고, 국민경제의 발전에 유리한다. 이것은 경제가 발달하지 않은 상태에서 발달하는데 지불해야 할 댓가다. 즉, "일부가 먼저 부유해지고 공동부유에 이르는 정책이 합당하다. 사회주의시장경제의 발전을 위해서는, 즉 시장이 정상적, 효율적으로 작용하기 위해서 공평과 효율의 문제에서 효율을 높인다는 전제하에 점차적으로 수입의 공평분배를 실현해야 한다. 그러나 이것은 장기적 과정이다. 효율이 점차 증대될 때만, 경제가 날로 발전하는 기초위에서만 점진적 公平分配가 가능하다. 만일 수입분배의 결과가 시장기능의 발휘를 막는다면 이것은 효율을 희생하는 것이고, 취할 수 없는 것이다."⁴³⁾

이처럼 공평분배보다는 효율을 강조하여 경제발전을 위해 불평등이 어쩔 수 없는 것이라면 과거에 사회주의자들이 자본주의의 불평등을 공격한 것도 의미를 상실하는 것이 아닌가? 결국 불평등은 체제의 속성이라기 보다는 특정역사발전단계에서 피할 수 없는 과정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또한 공평한 수입분배는 장기적 과정이고, 효율을 전제로 해서만 실현될 수 있다는 주장은 결국 지금 당장은 공평한 분배를 희생해서라도 효율을 높여야 한다는 생각을 강하게 반영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등소평에 따르면 "사회주의가 노동에 따른 분배원칙을 따르는 것은 빈부의 과대한 격차를 만들 수 없고, 양극분화도 발생할 수 없다."고 한다. 여기서 양극분화 개념은 王若望의 이중적 의미를 지닌 개념의 첫째 의미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王에 따르면 兩極分化는 i) 계급적 착취가 형성하는 부익부, 빈익빈 ii) 각자의 노동이 상이한 가치를 창조하는데 따르는 차이로 구분하다. 이 개념에 따라 중국은 현재 후자 의미의 양극분화만이 존재하고, 이는 합리적 분배형태이고, 이것까지도 양극분화라 한다면 사회

43) 같은 글, p.188.

의 작용에 방해가 되는가? 혹은 효과적인 작용을 하는가? 어떻게하면 수입의 공평분배를 유지하면서 시장이 정상적으로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이에 관해서는 두가지 문제가 고려될 수 있다. 첫째, 사회주의시장경제 중 재산소유로 인한 수입문제이다. 현재 중국은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키고 평균주의에 반대하고 수입차이를 인정한다. 이것은 바로 각종 재산수입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로 인한 수입의 격차는 시장이 정상적, 효율적으로 작용하는데 필요하다. "시장이 정상적으로 운영되기 위해서는 수입격차의 확대는 불가피하고 필연적인 것이다. 그러나 수입분배가 공평을 유지하도록 하고, 재산수입이 수입의 중요요소가 되지 않도록 하고, 재산수입차이가 개인수입의 큰 차이를 유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방법은 사람들이 수입을 투자에 이용하는 것을 막지 않으면서 재산수입의 재분배를 강화하여, 누진세를 징수하는 한편 稅收등의 방법을 이용해 재산수입이 재투자산업에 이용되고 개인소비에 이용되지 않도록 하여 개인생활수준의 차이를 축소해야 한다."⁴¹⁾

둘째, 시장이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수입의 차이 문제다. "수입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으면 경쟁을 고무할 수 없고, 시장도 정상적이고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없다. 여기서 공평과 효율의 문제가 발생한다. 점차적으로 '共同富裕'에 도달한다는 조건하에서 수입차이를 인정해야 한다."⁴²⁾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공평분배와 시장의 조화에 대한 결론은 수입의 격차는 시장이 효율적으로 운영되기 위해 필요한데, 이것은 또 사회주의가 지향하는 공평분배에 위배되므로 세금을 통해 조절해야 한다는 것이다.

41) 蕭灼基, "關於社會主義市場經濟的幾個認識問題", 日山 編「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北京:人民出版社, 1992), p.187.

42) 같은 글, p.187.

따라서 개혁과는 일시적으로 평등을 희생해서라도 효율을 위해 빈부차를 인정해야 한다고 본다. 그렇기때문에 자본주의방식이라 여겨왔던 시장경제를 도입하는데 적극적이다. 즉, “대담하게 서방 자본주의국가의 유용한 것을 흡수하여 이용하는 것은 사회주의사회의 생산력발전에 유리하고, 사회주의국가의 종합국력증강에 유리하고, 인민의 생활수준향상에 유리하다. 결국 사회주의제도의 공고, 발전에 유리하다.”⁴⁸⁾

IV. 결 론

중국은 현재 시장경제를 制度나 主義와 분리시켜 사회주의나 자본주의체제 모두 시장경제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사회주의시장경제가 결국은 자본주의화가 아니냐는 비판에 대해서는 소유제가 공유제를 주체로 하므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근본적으로 구별되고, 이런 맥락에서 私營經濟와 자본주의의 私企業의 기능이 다르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사회주의시장경제에서의 시장은 어떻게 정상적이고 효율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가? 결국 소유제구조를 개혁하여 시장이 활동할 수 있는 기반을 형성할 수 밖에 없다. 왜냐하면 “전통적인 사회주의 국가소유제 기업은 시장활동의 주체를 형성할 수 없고 시장과 병존도 곤란하다. 그 이유는 국가가 유일한 자산소유자. 경영자이므로 국유기업은 독립적 이익주체가 아니고 자주경영도 곤란하다. 따라서 국유기업은 시장경제의 주체가 아니고 될 수도 없다. 따라서 개혁이후 국유기업이 사회주의상품생산자, 경영자가 되도록 했고, 기업의 자주권을 확대하여 경제책임제를 실행했다. 시장활동에 있어서 중요한 문제는 전통적 국가소유제와 공유제형식이 시장과 공존불가능하다는

48) 方生, “再論對外開放和利用資本主義”, 『新華文摘』 1992. 6, p.12.

것이다.” 따라서 소유제구조를 개혁하여 다양한 공유제를 주도로 하는 다양한 소유제를 발전시켜야 한다. 이것은 사회주의상품경제발전을 위해 필요하다. 다양한 공유제란 국유제와 같은 공유제를 주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유제도 합작사 공유제, 집체공유제, 공유법인주식제 등 혼합적 공유제가 존재한다. 이런 소유제의 개혁은 소유제로 체제의 속성을 구분한다는 주장의 근거를 약화시키고 있다.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은 상품경제와 그것이 전사회적으로 확산된 시장경제를 사회주의경제로 인정한다. 이것은 첫째, 결국 ‘상품’을 기본개념으로 자본주의를 분석하여 ‘착취’를 지적함으로써 경제적 불평등을 밝힌던 마르크스의 이론에 대한 부정이라고 생각된다. 즉 상품경제사회는 설명 착취가 부분적으로 존재할지라도 국가에 의해 통제될 수 있고, 생산력 발전에도 효율적이라 한다. 그렇다면 상품경제, 시장경제는 그 자체가 부정되지 않고도 사회주의사회에서는 그 모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경우 상품경제를 택한 자본주의도 국가자체의 노력에 의해 상품경제의 모순을 서서히 해결해 갈 가능성을 인정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이런 증거는 자본주의에 대한 재평가에서도 그 가능성을 보이고 있다.⁴⁹⁾

둘째, 사회주의가 시장경제를 발전시킨다면 세계체제를 시장경제라는 단일의 체제로 보았던 월러스타인의 ‘세계체제론’의 설명력이 증대된다고 할

49) 자본주의발전사와 현재의 상황을 종합해 보면 생산력의 발전 및 사회화, 국제화의 정도가 높고, 자본주의생산관계도 부단히 발전하고 있다. 개인자본이 주식자본으로 변하고 일반독점이 국가독점으로 변하고 국가독점이 서서히 국제독점의 과정으로 들어서고 있다. 생산력의 사회화, 국제화정도가 높은 동시에 자본주의개인점유제도 그 자체의 범위내에서 점차 사회화, 국제화되고 있다. 자본주의사유제의 큰 틀을 전제로 하는 전제하에서 자본주의 생산방식의 기본모순의 근본적 해결은 불가능 하지만, 자본주의조건하에서 부분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가능할 뿐만 아니라 이미 객관적 사실이다. 생산력발전의 요구에 적응하여 자본주의가 변했기 때문에 과학기술혁명이 가능하고 사회생산력의 증대가 가능했다. 施岳群, “對當代資本主義及其與社會主義關係若干問題的再認識”, 「上海社會科學」, 1989 第 1 期, p.5.

수 있다.

그러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가 장기공존한다는 조건하에서 두 체제가 수렴할 수 있는가? 기본경제제도로 말하면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수렴할 수 없다. 그러나 경제운영 메카니즘을 보면 두 제도가 모두 사회화대생산을 기초로 하기 때문에 상품경제를 발전시키고 수렴의 현상이 출현할 수 있다. 실제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는 발전과정중 교차하고, 침투하며 서로 성공의 길을 모방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국가는 이미 사회주의국가의 유익한 경험을 받아들여, 정부가 경제에 대한 거시적 통제를 강화하고 계획조절의 기능을 실행한다. 또한 복지제도를 확대하고 수입 격차를 축소하려 한다. 사회주의국가도 자본주의국가의 장점을 받아들이고 있다.⁵⁰⁾

자본주의가 사회주의와 수렴하는 현상을 지적하는 견해는 자본주의에 대한 재평가에서 다음과 같이 지적되고 있다. 현대 자본주의의 중대한 변화는 사회주의의 일부 방법, 주장과 비슷한 것을 이용하여 초기 자본주의의 주요 폐단이 일부 소멸 혹은 완화되어서 생산력의 발전을 촉진했다. 예컨대 '계급대립의 해결로써, 일부 국가는 복지정책을 통해 노동자와 자본가관계를 개선하여 부르조아의 계속적 이윤증가를 보장하면서도 다양한 분배형식을 실행하여 중산층이 증가했다. 따라서 양극분화를 어느정도 저지하므로 계급모순을 완화했다. 또 생산의 무정부성의 극복, 인간의 적극성, 창조성을 촉진하여 과학기술의 진보와 생산력의 증가를 촉진했다. 현대 자본주의에서 발생한 이런 변화는 사회주의가 실현하려는 이상적 현실과 어느정도 접근했다.'⁵¹⁾

중국의 사회주의재인식을 고찰하면서 제기되는 문제는 사회주의국가가 시장경제를 도입할 수 있다는 것으로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하는 것

50) 같은글, p.8.

51) 王濤新, "試論當代資本主義變化的實質和社會主義的前途", 「上海社會科學」, 1989. 6, p.2.

이 현실적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인가?이다. 현재는 변화의 과정이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이다. 사회주의나 자본주의라는 개념의 경제선이 모호해지는데도 기존의 개념으로 새로운 변화를 설명해야 하는가? 대립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사회주의와 시장경제를 결합하여 설명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결국 '사회주의시장경제'라는 것은 기존의 지향해 온 이념을 고수하면서도 현재를 설명할 수 있다는 환상을 충족시켜주는 개념사용에 불과한 것이 아닌가?

중국은 사회주의시장경제론을 통해 앞으로 중국이 지향하는 방향을 명확히 밝혔다. 즉, 중국식 사회주의란 정치적으로는 개혁을 일단 유보하여 4항견지를 하면서 경제적으로는 시장경제체제를 이용하여 현대화를 하려는 것이다. 이런 생각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문제는 더 이상 정치개혁없이 시장이 중국내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는나이다. 또한 근대화가 권위주의 정권을 발생시킬지라도 결국은 민주화의 요구에 부딪치게 되는 한국의 상황을 고려해 볼때, 중국의 현대화 역시 정치개혁의 요구를 피할 수 없으리라 본다.

< 참고 문헌 >

[單 行 本]

中國北京市黨史研究室 北京市黨史學會 編, 「中國共產黨與社會現代化」.

(北京: 人民大學出版社, 1991)

쿠킨스키, 윌러스타인, 조영환 공편. 「전환기의 마르크스주의」.

(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0)

[論 文]

龔育之, “中國社會主義的命運”, 「新華文摘」1992. 12.

——, “我國社會主義初級段階的歷史地位和主要矛盾”, 「紅旗」1987.

第 22期.

官希魁, “論社會主義市場經濟的理論創新”, 「新華文摘」1992. 12.

蘭灼基, “關於社會主義市場經濟的幾個認識問題”, 日山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董輔仍, “論市場和社會主義市場經濟”, 日山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藤文生, “全面推進有中國特色社會主義事業的偉大綱領”

鄧小平, 「建設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 (香港: 三聯書店, 1987).

馬洪, “發展社會主義市場經濟 完善計劃與市場經濟相結合的新體制”.

日山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方生, “再論對外開放和利用資本主義”, 「新華文摘」, 1992.6.

山內一男, 「中國社會主義經濟研究序說」(東京: 法政大學出版局, 1972).

- 薛暮橋, “關於社會主義市場經濟問題”, 日山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 薛暮橋, “신민주주의에서 사회주의초급단계로”, 서석홍 편역, 「중국사회주의」, (서울: 풀빛, 1990)
- 施岳群, “對當代資本主義及其與社會主義關係若干問題的再認識”
「上海社會科學」, 1989, 第 1 期.
- 王若望, “양극분화에 대한 나의 견해”, 강인덕編, 「중국주요논문선집」,
(서울: 극동문제연구소, 1988).
- 王濰新, “試論當代資本主義變化的實質和社會主義的前途”, 「上海社會科學」,
1989. 6.
- 于光遠, “市場經濟體制下的計劃調控”, 「新華文摘」, 1992. 12.
- 劉國光, “略論社會主義市場經濟”, 「新華文摘」, 1992. 12.
- , “關於計劃與市場的幾個問題”, 日山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 陸學藝, 張厚義, “個體私營經濟健康發展的幾個問題”, 「新華文摘」, 1992.12.
- 웅영오, “상품경제를 발전시키는 것과 생산력을 발전시키는 것의 동일함을 논함”, 서석홍 편역, 「중국사회주의개혁의 진로」, (서울: 풀빛, 1990).
- 林子力, “現代市場經濟和現代社會主義”, 日山編, 「著名學者論社會主義市場經濟」, (北京: 人民出版社, 1992).
- 張之光, 万圭蘭, “試論當代中國私營經濟的性質問題”, 「新華文摘」, 1992.12.
- 전세명, “사회주의초급단계에서 '노동에 따른 분배'에 관한 세가지 문제”,
「중국사회주의개혁의 진로」, (서울: 풀빛, 1990).
- 趙紫陽, “沿着有中國特色的社會主義道路前進”, 國防部應政治作戰部編,
「共匪原始資料彙編」第 58 號, (臺北: 國防部應政治作戰部, 1987)
- 包心鑑, “論深化對社會主義的再認識”, 「上海社會科學」, 1989. 2.

Robert C. Hsu, "Conception of the Market in Post-Mao China,"

Modern China (1985. 10)

Yu Guang Yuan, "The Economy of The Primary Stage of
Socialism," Social Sciences in China(Summer, 1988).